

전기자동차, 2011년 양산 본격화

지경부, 2013년에서 2년 앞당겨 ... 2014년까지 4000억원 지원 검토

2013년으로 예상됐던 전기자동차의 양산을 2011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0월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남양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비상경제 대책회의에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비롯해 법·제도 정비, 시범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산업 지원, 보급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양산시기를 2011년 하반기로 앞당길 방침이다.

우선 중점 육성이 필요한 전기자동차 전장부품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비용 550억원을 포함해 2014년까지 약 4000억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또 전기자동차 미래전략 포럼을 구성해 2010년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종합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도 정비는 전기자동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허가 조건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근거규정도 마련하게 된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일정 구역에서만 주행을 허용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급 활성화 대책으로는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2014년까지 2000대 이상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요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개발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시장이 조기에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및 고유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08>